

## 불황일수록 더욱 중요해지는 ‘공생 발전’

박 상 규 | 대한건설협회 상근부회장

최근 ‘공생 발전’에 대한 논의가 한창이다. 정부는 ‘건설 근로자 임금 보호 강화 방안’을 발표하였고, 국토부에서는 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 및 건설 근로자 등 건설 생산 과정에 참여하는 모든 주체를 비롯해 문화·커뮤니케이션 관련 전문가까지 포함한 “건설산업 공생발전위원회”를 발족시켜 건설 산업 이미지 개선, 참여 주체간 공생 발전 정착 및 경쟁력 제고 등을 집중 검토할 계획임을 밝히고 있다. 특히, 정부 정책이 원·하도급간 관계 개선에만 치중하던 것에서 벗어나 발주자의 책임을 강조한 점은 건설시장의 수요이자 감시자인 발주자도 공생 발전에 적극 참여시키겠다는 의미로, 업계 입장에서는 그 성과에 기대하는 바가 매우 크다.

건설산업에 있어 공생 발전이란 건설 생산 체계의 참여 주체 모두가 협력하여 발전의 혜택을 함께 누리는 이른바 ‘생태계적 동반 성장’의 개념이라 할 수 있다. 그동안 정부에서도 ‘상생 협력’ 및 ‘동반 성장’을 위한 제도 개선에 다각적인 노력을 하여 왔다. 그 결과 공정위 실태조사 결과에서 나타나듯 「하도급법」 위반 혐의 업체 비율이 최근 10년 사이 89.3%에서 47.0%로 감소하였고, 하도급 대금 현금성 결제 비율은 34.8%에서 92.9%로 크게 증가하였다. 더욱이 작년에는 13개 대형 건설사가 3,800여 개 협력사에 상생 펀드 조성, 현금 지급 비율 확대 및 자금 대여 등의 방법으로 약 1조 4,400억원을 지원한 바 있다.

물론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동반 성장의 체감 온도

가 기대에 미치지 못할 수도 있고, 그 혜택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계층이 여전히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다. 특히, 근로자 임금 체불이나 자재·장비업자에 대한 대금 미지급 문제는 수시로 사회 문제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는 최저가낙찰제 등 저가 수주를 강요하는 입찰제도가 근본 원인이지만 일부 건설업체의 부적절한 행태에 원인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공생 발전을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제도 개선과 함께 상대방을 인정하고 배려하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할 것이다.

‘공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파이를 쪼개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파이를 키우면서 각 주체들이 혜택을 나누어 가지는 것이다. 인위적인 물량 배분이나 일방의 희생만 강요하는 식의 기존 방식으로는 참여 주체간 불신과 갈등만 초래하게 되고, 결국 ‘공생(共生)’이 아닌 ‘공생(空生)’이 되고 말 것이다.

건설산업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의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올 2/4분기 건설업 성장률이 마이너스 10%를 기록하면서 회복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미국과 유럽의 재정 위기는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을 높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는 남이야 어떻게 되든 자신의 논에만 물을 대겠다는 ‘야전인수(我田引水)’의 유혹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건설경기 침체의 골이 깊어지고 있는 이 시점에 다른 어떤 산업보다도 건설산업의 참여 주체간 ‘공생 발전’의 필요성이 더욱 절실하게 느껴진다. CERIK